

언론의 품격을 해치는 것들

손수호 · 인덕대 교수,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요즘은 일간 신문을 만든다는 게 아주 경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 순간 사리분별을 하고, 평가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건 거의 신의 영역 아닌가 싶은 것이다. 2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까지 28년간 매일 그 일을 했고 기자생활을 그만 둔 지 겨우 3년쯤 지났는데도 지난 일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그 벽찬 과업을 수행하는 후배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낸다.

기자에서 교수로 말을 갈아타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나”며 부러움 가득한 눈길을 던진다. 맞다. 열에 일곱은 좋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넓어진 게 가장 매력적이다. 기자의 시간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교수도 일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의 배분과 관리에 주체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기자의 시간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기자에 밀리는 것은 파워드. 경험칙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의 직전 명함이었던 논설위원과 교수의 명함은 주고받을 때 느끼는 무게가 달랐다. 그것은 세상에 미

치는 영향력을 따져 그럴 것이다. 제도권 언론의 기자가 1만 명 정도, 전국의 교수 숫자는 10만 명에 가까우니 희소성의 가치에서도 뒤질 수밖에 없다.

언론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거리는 여기서 생겨났다. 원래 있던 위치에서 내려와 보니 기자들의 언어는 때때로 힘 있는 집단의 폭력으로 들렸고, ‘취재’와 ‘편집’이라는 고유의 직능이 거칠게 다가왔다. 젊은 기자들의 품위 없는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인권 불감증, 안하무인의 태도가 불편했다. 저널리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전반이 때로는 상당히 불량하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 홍보업무를 맡고 있을 때의 일이다. 경찰기자 한 명이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따져 물었다.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등이 학교에 찾아와 캠퍼스 곳곳을 촬영하더니 총장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다. 설득 끝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며 겨우 돌려



보냈지만 VCR 카메라를 둘러맨 채 대학본부 복도를 헤집고 다니는 3인 1조의 행동 거지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마치 현행법을 체포하려 들이닥친 경찰관 행세를 하는 모습은 동료교수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울 정도였다.

보도 후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다. 대책점에 있는 이익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무리하게 쟁점을 찾아보니 사실관계의 왜곡이 많았다. 그래서 정정을 요구했지만 데스크에서는 반론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보도 내용이 100% 허위는 아니기에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취재기자는 한사코 회피하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겠다는 최후통첩을 받고 서야 몇 줄의 반론 기사를 달았다. 정정을 요청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자신의 기사에 흠집이 나는 것을 좋아할 기자는 없을 것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또한 저널리스트의 직업윤리인데도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또 하나 거론하고 싶었던 것이 언론사의 과도한 상(賞) 비즈니스

다. 언론계에는 언론사의 권위를 배경으로 객관성, 공정성 등에서 훌륭한 전통이 수립되어 있는 상들이 많다.

문제는 이런 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수상한 상이다.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내는 중진화가가 전화를 했다. 한 신문사에서 상을 주겠다고 하는 데 받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청했다. 평생 그림만 그린 화가여서 세상 물정에 어둡긴 해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직감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심사를 하는지 묻자 직원이 대답했다. “심사절차는 따로 없다.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부서 차원에서 임의로 상을 주고 협찬금을 받는 시스템이었다. 실적이 필요한 사업부서에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겠지만 경제적 이익과 언론의 공신력을 맞바꾸는 셈이다. 나는 그 화가에게 “받는 게 이상한 상이니 없었던 셈 치라”고 조언했다.

신문 섹션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상은 광고와 협찬, 왜곡된 마케팅과 연계되면서 불신을 야기한다. 권위 잃은 상으로 인해 언

론사의 명예도 동반추락한다. 수상 사실이 오히려 불명예로 작용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름만 그럴싸하게 지었을 뿐 정체성이 모호한 언론단체가 상을 남발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유명회원뿐이면서 대표성을 주장하거나, 일부 전문지와 협력해 시상제도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단체도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같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이 된다.

관찰자의 세 번째 시선은 어쩔 수 없이 문장에 쫓힌다. 요즘 언론인들을 문청(文靑)들이 많았던 과거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글로 밥을 먹고 사는 직업인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덕목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문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학적 수준이 높은 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어법에 맞게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면 족하다. 그런데도 문장의 기본에 어긋나는 글이 많다. 심지어 한 문장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한 번은 이런 기사를 봤다. 미당 서정주의 동생 우하 서정태 시인에 관한 내용이다.

“내가 시를 쓴 건 전적으로 미당의 영향이야. 그런데 미당은 내 시를 한 번도 칭찬해준 적이 없었지.”

여기까지는 좋다. 형님이 문학을 하는 동생에게 아주 엄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런데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우하는 딱 한 번 시집을 냈다. 86년 동아출판사가 펴낸 『천지의 노래』다. 미당이 그를 불렀다. ‘네 시 참 좋더구나.’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었다.”

미당은 우하의 시를 칭찬했나, 하지 않았나? 지금도 궁금할 따름이다.

다음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의사와 나는 대화를 담은 기사다.

“이 교수에게 ‘왜 오만행을 결심했느냐’고 물었다. ‘그냥 나랑 같은 해군 출신이어서요. 환자 치료하는 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이 교수는 석 선장이 같은 해군 출신이라 오만에 간 것인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간 것인가. 어떻게 이 짧은 글 안에 모순되는 내용의 문장이 나란히 자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기자에게는 취재원의 육성을 그대로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취재원의 진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또한 독자에 대한 예의이자 기자의 또 다른 의무다. 사소한 오기도 많다. 가령 ‘음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약칭인데도 ‘한국음반저작권협회’로 잘못 표기하는 것은 애교 수준으로 넘기기로 한다.

문장 이야기를 하면서 한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한 중앙일간지 기사의 내용인데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인터뷰한 기자가 이렇게 묻는다.

“4년제와 똑같이 학교명 끝에 교(敎) 자를 붙이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질문은 예리하지만 핵심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학교에서 ‘교’의 한자가 ‘校’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잘못이 나오는 데 대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독자 입장에서는 한글 문장이 틀린 경우라면 음운구조상 오타라고 이해해 줄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쉬운 한자 표기를 틀리면 기자의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된다.

한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외에도 많지만 짧은 독자들은 따분하게 여기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드라마 말미, 드디어 선우와 보라가 결혼식을 올리는 대목이다. 여기서 살짝 스쳐가는 장면이 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예식장 내에 신랑, 신부의 이름을 표기한 안내판의 내용이였다. 놀랍게도 ‘新郎 성선우 군, 神父 성보라 양’라고 적혀 있었다.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나중에 검색해 보니 사실이었다. 빠듯하게 쫓기는 제작 환경이 만들어낸 실수겠지만 성보라가 가톨릭 신부라니!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컴퓨터 자판이다. 글 쓰는 사람들이 워드프로세서에서 한글을 한자로 바꿀 때 F9 자판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 때 한자 묶음을 선택할 때 실수가 발생하곤 한다. 언젠가 마포 강변의 잠두봉을 ‘蠶豆峰’으로 적은 기사가 있어 직접

‘잠두’를 치고 블록을 씌운 뒤 F9 자판을 눌러보니, 아니나 다를까. ‘蠶豆’와 ‘蠶頭’ 두 가지가 화면에 등장한다. ‘神父 성보라 양’도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게 아닐까 싶다.

기사는 시간과의 전쟁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늘 잘못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쉬운 것은 보도 이후에도 잘못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이런 오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161년 전에 잘못 표기한 이름을 바로잡은 뉴욕타임스의 사례가 떠오른다. 2014년 3월 4일 이 신문은 1853년 1월 20일자 기사에서 납치당한 흑인 남성 이름이 솔로몬 노섭(Nothup)인데도 노스롭(Northrop) 혹은 노스럽(Northrup)으로 잘못 표기했다며 정정 기사를 실었다. 

